Vol.56

2026.8.20.

정책이슈 리뷰

Policy Issue Review

해외동향 AI 시대, 유럽의 돌봄에 묻고, 충청남도가 답할 차례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 인재양성 촉진 p.5
교육부

대한민국 관광지형을 지방으로 넓히는 '관광권' 육성 본격 시동 p.7
문화체육관광부

도전의 문은 넓히고, 지원은 두텁게: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p.1
중소벤처기업부 외

서울시, 식생활교육 전문강사 양성 지원 p.15
서울특별시

'화학사고 안전신호등' 국가 안전관리 표준화 추진 p.18
인천광역시

경북도, AI기반 스마트 APC 확산... 농산물 유통 혁신 본격화 p.22
경상북도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EU
AI 시대, 유럽의 돌봄에 묻고, 충청남도가 답할 차례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EU 집행위원회(유럽사무소), 세계법제정보센터
참고문헌: 2026 Welfare & Communication 콜로퀴움, AI 돌봄 서비스 2026,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026~2030)

유럽의 돌봄에 묻다

- 충청남도는 초고령사회에 직면하여 돌봄 인력 부족과 복지 수요 급증이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구 중 고령층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의료·요양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임
- 유럽에서는 개별 기술 도입을 넘어 AI 복지테크(AI welfare technology)를 하나의 시스템적 개념으로 다루며, 이용자 중심 설계와 윤리적 검증을 함께 요구하고 있음
- 민선9기 출범에 따라 'AI기반 충남형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준비 중인 현실에서 유럽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충청남도가 통합돌봄 모델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음

사람 중심 설계와 인력난 대응, 두 축으로 움직이는 유럽

- 유럽 각국의 AI 돌봄 정책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이는 고령화와 이민 배경 돌봄 인력의 의사소통 한계로 심화되는 인력난과 기술이 돌봄의 주도권을 이용자가 아닌 관리자에게 옮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됨
-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가 202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전체가 환자 치료 개선을 AI 도입의 핵심 동인으로 꼽았으며, 이미 다수 국가가 임상 현장에 AI 도구를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각국은 이를 안전하고 형평성 있고 책임 있게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다지는 단계로서 기술 확산 속도만큼이나 표준화와 이용자 참여 절차를 함께 설계

EU 차원의 제도 정비-돌봄전략과 AI 법

- 아동돌봄과 장기요양을 아우르는 생애주기적 접근을 취하며, 회원국에 장기요양 코디네이터 지정과 접근성·품질 기준 마련을 권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Plus; ESF+), 지역개발기금, 호라이즌 유럽 등 다양한 EU 재원이 각국의 장기요양 개혁에 투입
- 2026년 8월 전면 시행되는 AI법은 의료 AI를 '고위험' 범주로 분류해 임상 평가와 기술문서 준비, 인증기관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인증기관의 AI 평가 역량 부족이 승인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이 향후 관전 포인트임

AI 통합돌봄 적용 사례 비교표: 영국,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연구·파일럿	지자체 확산중	국가 차원 확대	제도화 진입
정서적 교감 중심	**자율성·존엄성 중심**	**예방적 돌봄 전환**	**제도화·전면 확산**
공감로봇 파울·레오, 물개로봇 파로	치매환자 GPS, 복약알림, 원격모니터링	NHS 앱 AI 트리아지, 2028년 전면 확대	AI 야간모니터링, 소셜로봇 LOVOT
인간 대체 아닌 업무 경감 보완	"감시"가 아닌 자율적 생활 지원 원칙	코로나 이후 예방적 돌봄 관심 급증	지자체 장기계약(네스트베드 7년·350억)
전국 표준화 이전, 연구·스타트업 협력	지자체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병행	국가기금(ASCTF)·공동위탁모델 추진	2026년 전국 AI돌봄법 제정 예정

해외 주요국의 세부 정책과 사업 사례

- 독일의 보험연계형 디지털 돌봄 — DiGA·DiPA: 독일 모델의 핵심은 '보험 급여화'. 디지털 건강앱(DiGA)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 등재되면 건강보험(GKV)재정으로 비용이 보전됨. 이는 기술의 지속 가능한 확산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 만성질환 관리와 정신건강·수면관리, 진단·임상지원 등이 주요 적용 분야
- 덴마크의 표준화·실증형 복지테크: '공통언어III(Fælles Sprog III)'라는 통합 평가 체계로 모든 고령자의 돌봄 욕구를 표준화해 진단하고, 이에 맞는 기술을 매칭. 도입 전 '리빙랩(Living Lab)' 방식으로 6개월 이상 실생활 환경에서 사용자 테스트를 거쳐, 덴마크기술연구소가 모든 복지기술의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해 공개하여 예산 투입의 근거를 명확히 함. 자동 약 분배 로봇 도입으로 복약 순응도를 95%까지 끌어올리고 연간 의료비를 20% 절감한 사례는 이러한 실증 절차가 실제 성과로 이어진 예

충청남도 활용 가능성 및 개선 과제

- 충청남도는 'AI 기반 충남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계획을 통해 돌봄 자원 분석과 지역 특화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런 흐름 위에 덴마크식 표준화된 욕구 평가 체계와 비용·편익 공개 방식을 접목하면, 시군별로 편차가 컸던 돌봄 자원 배분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독일·덴마크 사례가 공통으로 보여주듯 기술 확산에는 재정 연계 장치와 실증 검증 절차가 함께 갖춰져야 하며, 충청남도 역시 AI 돌봄 기기·서비스를 단발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보험·지방재정 연계)과 리빙랩 방식의 사전 실증 절차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럽 사례에서 지적되는 우려, 즉, 기술이 이용자가 아닌 관리자 중심으로 설계될 위험은 충청남도 통합돌봄 모델 설계 단계에서도 유념할 대목으로 당사자와 현장 돌봄 인력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함께 마련한다면, 기술 도입의 속도뿐 아니라 수용성과 실효성까지 갖춘 충남형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음

김 희 정 극동대학교 교수

- ✓ **충청남도는 독일의 DiGA·DiPA 사례처럼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을 함께 설계할 필요**
- ✓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에 덴마크의 표준화된 욕구 평가 체계와 사전 실증 절차를 접목해, 돌봄 자원 배분에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검증 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
- ✓ **이용자 중심의 설계로 실제 당사자와 현장 돌봄 인력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같은 민·관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신속·총력 추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AI고속도로 핵심 인프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에 첫 삽. 2026.08.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 데이터 확보·활용을 위해 범부처가 함께 나선다. 2026.05.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글로벌 1등 차세대 네트워크로 완성한다. 2025.12.18.

1. AI고속도로란?

-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전국 AI인프라를 연결하는 개념인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구상이 탄생
- 2025년 6월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격려사에서 「AI 시대의 고속도로」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
- 「AI고속도로」는 데이터, 네트워크 및 컴퓨팅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데이터와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여 산업과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대전환(AX)을 견인할 핵심 기반 인프라

2. (데이터)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마련·발표
- 민간에서 확보 어려운 핵심·고수요 데이터의 전략적 확충
- 민간·공공데이터를 필요 국민이 활용 가능하도록 「AI허브 플랫폼」을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확대·개편
- AI학습 등에 필요한 대량·고품질 데이터의 개방성 및 활용성 확보를 위해 각종 법·제도 개선
- 중소벤처 기업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3. (네트워크) 국가망 고도화

-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발표
- 세계 최고 수준의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 전략
  - 이동통신, 유선(광)통신, 해저광케이블·위성통신 등 국가 네트워크 全 영역 지능·성능 고도화 추진
- 6G·AI네트워크 산업 1등 국가 도약
  - 글로벌 6G·AI네트워크 시장 점유율 20% 및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글로벌 기업 5개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수요 창출, 제도 개선 및 기반 조성 추진
-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이행을 위한 '26년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 까지 2,900억 원을 투자

3. (컴퓨팅) 국가 AI 컴퓨팅 센터

- AI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로 최신·최고 성능의 AI컴퓨팅 자원을 통한 AI 연구·개발 및 서비스 환경 조성
  -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
  - GPU·NPU 등 AI 반도체 1.5만장 및 최종 전력 120MW 규모
  - 사업예산 2.5조로 사업 계획 및 공모 시작(2025.10.)
  - 삼성SDS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6.3.10.)
  - 최종 사업자 확정 후 전담 법인 코아크 설립(2026.5.11.)
  -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식(2026.8.3.)
- 최초 공모부터 착공식까지 약 10개월로 일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2~3년 소요 대비 신속하게 추진 중

※ (출처: 6G 사업단) 트래픽 예측치는 1일 기준, '24년 5G 일일 트래픽은 인당 약 900MB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의 필요성(인공지능 서비스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

이 은 구 과학기술진흥본부 부연구위원

✓ 정부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고속도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신속하게 추진 중이고 충청남도도 7대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AI수도」를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 중

✓ 국방 분야에서는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체계기업의 요구사항인 AI국방로봇 실증테스트베드, 군의 유무인복합체계 구축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및 충청남도의 지리적 자원을 연계한 「민간실증플랫폼」과 같은 국소적 사업 추진 필요

교육부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 인재양성 촉진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 인재양성 촉진. 2026.06.23.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기본계획 안내. 2026.06.24.

1. 초광역 산업·경제권 단위 인재양성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교육부는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의 본격 추진을 통해 시도 경계를 넘는 지역발전 인재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 (추진 목적) 이를 통해 산업·경제권 단위의 '대학 진학-기업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도모
- (관련 국정과제)
  - 55-1.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
  - 55-2. 지역산업과 국립-사립대 동반성장 위한 RISE 재구조화

2.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5극3특 공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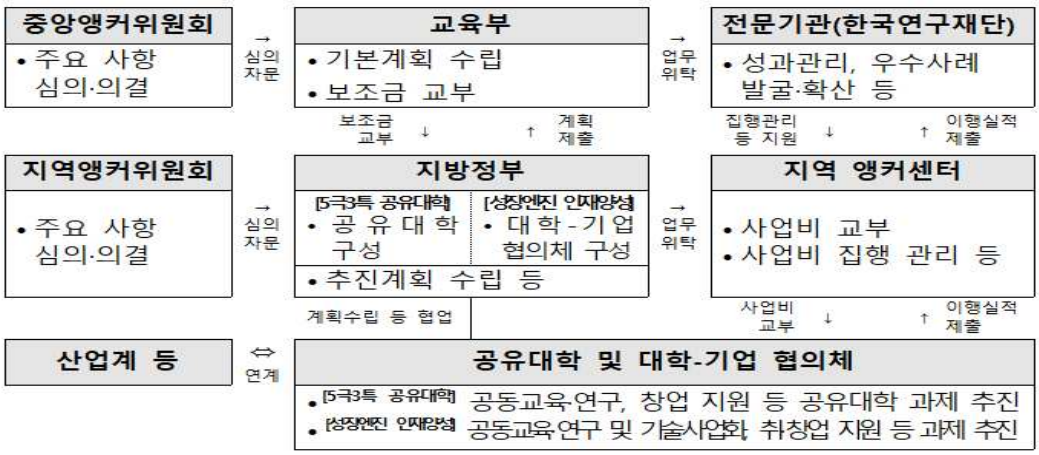
- (목표) 5극3특 권역 단위로 대학 간 교육·연구 등을 함께 수행하는 공유대학을 구성하여, 지역대학 역량 강화
-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역거점국립대 주관 공유대학(9개) 대상으로 `26년 1,200억 원 지원(총 4년 지원)
- (추진 과제) 공동 교육과정 운영, 공동 연구, 자원 공유 등의 '공통과제' 및 창업거점 역할 수행, 기초 교양교육 공유 등의 '선택과제' 추진
- (추진 일정) 추진계획 1차 제출(7월) 및 최종 제출(8월)

3.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 (목표) 행정 경계를 넘어서 생활권, 산업·경제권에 따라 초광역 단위로 산학일체형 인재양성 확대 추진
- (지원 대상 및 규모) 초광역 단위 대학-기업 협의체(6개 내외) 대상으로 `26년 800억 원 지원(총 4년 지원)
- (추진 과제) 복수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초광역 단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취업 지원, 창업 지원, 기술사업화 등의 공동 과제 추진
- (추진 일정) 추진계획 제출(8.3.) 및 평가·선정(8.28.)

4. 기대효과

- 국민주권 정부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경제권에 기반한 초광역 단위의 정주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임
- `26년 4월 교육부는 '앵커(舊 RISE) 추진방안'을 통해 지방정부별 인재양성 체계를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산업·경제권역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은 시도 경계를 넘어서 지방정부-대학-기업의 협업을 촉진하는 재정적 마중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김 태 성 충남라이즈센터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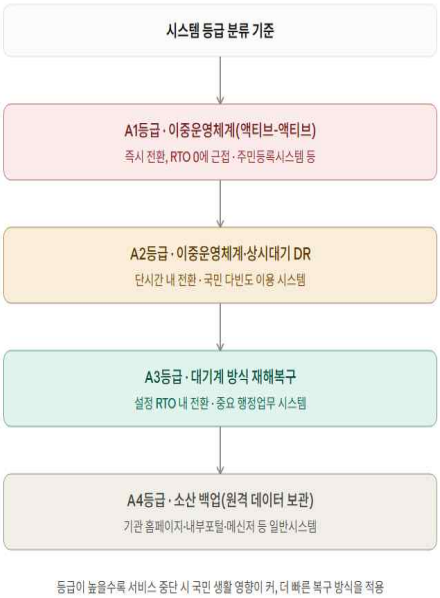
✓ 정부의 인재양성 정책이 기존 시도 단위에서 산업·경제권 중심의 초광역 체계로 확대됨에 따라, 충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충청권 대학·기업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함

✓ 충남 앵커를 5극3특 및 초광역 성장엔진 정책과 연계하여 재구조화하고, 충청권 단위 공동 인재양성을 통해 '대학 진학-기업 취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할 필요 있음

행정안전부

AI 디지털 행정정보서비스 안정화 정책(등급별 DR 설계) 추진

출처: 보안뉴스, 2026.7.20.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개요) 디지털 행정정보 중요성과 안정성 강화

- 디지털 행정이 일상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가 되면서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행정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가속화
- 2025년 9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이후 정부 행정시스템 709개가 마비되며 민원서류 발급을 비롯한 부처업무 차질 문제 발생
- 2026년 행정안전부는 기관마다 상이한 정보시스템 운영기준을 표준화하고, 국민생명, 안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 안정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고시 제정

(사업내용) 행정정보의 등급별 DR(재해복구) 설계

- AI전략위원회는 시스템을 가용성과 국민생활영향도를 기준으로 등급화(A1-A4)하고, 등급별 복구목표시간(RTO)에 맞는 DR 방식을 차등적용하는 방안 제시
- A4등급(기관 홈페이지, 내부포털 등)은 원격지 백업수준, 핵심등급은 보다 강한 이중화를 적용하고, 공공시스템의 강건성을 위해 3축 중심의 지역분산 체계 도입
- 후속 이행사업으로 2026년 7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ISP 사업'을 발주하여 주민등록시스템,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시스템 등 주요 정보자원에 대한 이원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사업내용) 행안부의 주요 개편사항

-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 구축: 총 2,417억 규모로 각 부처가 활용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일괄 관리하여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구축
- 국정자원 혁신 ISP: 노후화된 공공데이터센터, 운영체계를 차세대 AI 정부 인프라로 개편하여 693개 공공시스템 로드맵 수립
- 협의체 구성운영: AI 기반 사이버 위협대응,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민간 클라우드 이전 등을 통한 공공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체계 구축

김 강 현 자치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 생성형 AI를 악용한 행정정보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의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정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행안부의 보안시설 이중운영 정책에 따라 기존의 대전센터 외에 공주센터로 이원화된 재해복구체계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인력·유지보수 수요 유입, 지역 IT·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 육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도 차원에서 전력·통신 인프라 지원, 관련 기업 유치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관광지형을 지방으로 넓히는 '관광권' 육성 본격 시동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관광지형을 지방으로 넓히는 '관광권' 육성 본격 시동. 2026.07.30.

수도권에 집중관 방한 관광객의 지역분산을 위한 '관광권' 육성

- 방한 관광객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적되는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권 육성 사업' 추진
- 문체부는 지방정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2026년 내 5대 관광권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 선정된 관광권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집중 육성하여 방한 관광객의 지역 방문·체류·소비 확대 추진

지방국제공항 관문도시와 인근 관광도시를 연결한 광역 관광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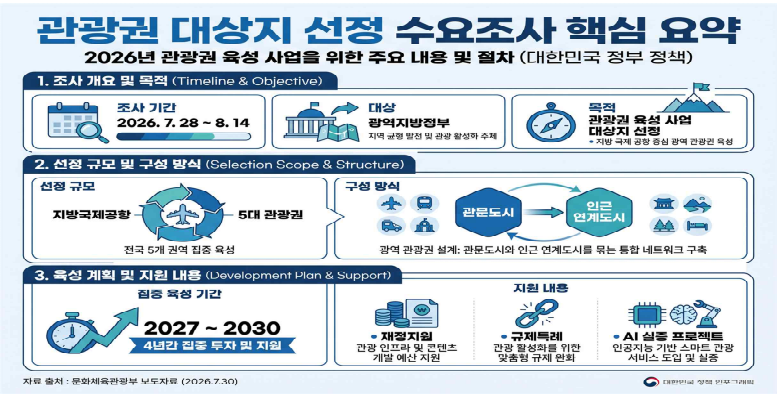
- '관광권'은 기존 시·도 및 시·군·구 등 행정구역을 넘어 방한객의 실제 여행 동선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관광 중심 권역
-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등 5개 지방국제공항이 위치한 관문도시를 중심으로 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인근 도시를 연계하여 관광권 설계
- 개별 지역 중심의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방한객의 지역 인지부터 방문 결정, 입국, 이동, 체험, 숙박 등 방한 관광 전 과정의 지역 연계 강화

재정·규제특례·AI 실증 등 관광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

- 방한객의 관광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 병목요인 해소 지원
- 관광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규제특례, 인공지능(AI) 실증 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지방으로 직접 입국한 외래객이 여러 지역을 연계 방문하면서 체류기간과 관광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관광거점으로 육성

지방정부 수요와 관광데이터 기반 '5대 관광권' 선정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권 선정위원회'가 5개 지방국제공한을 중심으로 방한객의 이동·체류·소비가 연계되는 5대 관광권 선정
-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7.28.~8.14.)를 실시, 제출된 관광권 제안서와 방한객 여정·관광수요 데이터,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지방정부의 수요와 방한객의 실제 여행 동선을 반영하여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 중심의 '방한 관광 골든루트' 구축 추진



김 경 태 문화·관광연구팀 연구위원

- ✓ 문체부가 올해 안에 '5대 관광권'을 선정하므로, 충남은 초기 공모·제안 단계에서 선점 전략이 중요
- ✓ 충남은 자체 국제공항이 없으므로 청주공항 중심 관광권의 핵심 연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백제문화권, 서해안 해양관광, 온천·미식·성지순례 등 차별화된 자원을 연계해 방한객의 이동·체류·소비가 연결되는 광역여행루트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 관광권 선정에 관광수요 데이터와 여정 분석이 반영되고 재정·규제특례·AI 실증 등이 지원되는 만큼, 광역교통·환승·안내체계 등 접근성을 강화하고 숙박·소비·이동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관광서비스와 스마트 안내 실증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법 및 재해대책법 개정법률 시행

출처: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재해2법 개정법률 8월 15일부터 시행". 2026.08.13.
2.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26.08.15.].
3.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26.08.15.].

(개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른 시행사항

- 보험료 할증 제외 확대를 통한 보험상품 실효성 강화
  -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
- 보험제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 시행
  - 손해평가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 시행 강화
  - 손해평가 결과 적정성 검증을 위한 조사실시 근거 마련
  - 보험가입자 권리 확대 등
- 현장 맞춤형 재해보험 상품 및 정책개발 기반구축
  - 농어업재해 발생빈도, 피해정도 등 실태조사 실시
  - 보험상품 적용가격에 대해 정부 공시 기반 마련

(개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시행사항

- 피해를 본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 구축
  - 재해범위에 폭염, 호우 등에 더하여 '지진'과 '이상고온', 이상고온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추가
- 기후위기 심각성과 원인 파악을 위한 세부 이행
  - 농어업 세부 피해규모,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 만족도, 재해대응 요령 인식수준 등 실태조사 실시
  - 정부가 재해지역 농가에게 피해사실 신고방법 안내고지 의무화
-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강화
  - 재파종·재정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외에도 재해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주요 내용) 개정 법률과 개정 시행령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재해보험 등 심의** : 재해의 범위,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손해평가 방법과 절차, 정부의 책임범위,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 적정성
- **보험료율 산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초과 시,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제외,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 변경 예정된 경우 공고 의무, 의견 수렴 등
- **손해평가 등** :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재해보험 대상 품목 품종, 재배방식 등 정기교육 실시, 부처는 손해평가 결과 검증을 위한 조사 실시
- **실태조사** : 농어업재해의 발생빈도, 농어업재해의 피해정도, 정기조사(5년 주기), 수시조사 등
- **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범위 및 정도를 행정구역별·권역별 및 보험목적물별 산출한 값의 상위 100분의 10 해당값
- **보험상품 가격의 공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 공시

(주요 내용) 개정 법률과 개정 시행령

- **농업재해 범위** : 가뭄, 홍수, 호우, 지진, 해일, 태풍, 강풍,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유해야생동물, 이상고온,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의무
- **기본계획 작성** : 재해 및 안전관리 목표, 재해 이전까지 생산투입 비용 보장 등 보조 및 지원, 재해 예방,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어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등
- **재해대책** : 재해 발생 시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 복구,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재해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경영안정 등의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작물 피해 예방,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지원 등
- **보조 및 지원** :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

강 마 야 농정혁신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기후재난에 취약한 농업 분야,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 개정('25), 시행(`26.08.)

✓ (농민 입장)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농업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지만 기후재난 문제를 정책보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근본 이의제기가 있는 만큼 현장의견 수집 활동 지속할 필요

✓ (행정 입장) 농어업재해 인정범위 및 지원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 책무가 강화되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 농정예산' 확대 편성,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와 상시 실태조사체계를 통한 데이터 축적 중요

국토교통부

2차원 지도에서 3차원·AI 공간분석 시대로, 공간정보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03.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공간정보산업 역량 강화

-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로봇배송, 스마트물류, AI 시티 등 신산업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
- AI를 활용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활용 기반 구축, 강소기업 육성, 인재 양성 위한 공간 정보 산업을 확장함

고정밀 공간정보 유통·활용 기반 마련 방안

- 규제 완화와 보안 지원을 강화함
  - 공개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민간 데이터의 보안 처리 유통 지원 및 기업의 데이터 활용 지원
- 공공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개방을 확대함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과 브이월드(vworld.kr)로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에 개방함
- GeoAI와 디지털트윈 활용 서비스를 제공함
  - 재난 대응 등의 디지털트윈국토 모델 확산과 GeoAI를 활용한 실생활, 기업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함
- AI-Ready 데이터 표준과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함
  - AI 활용을 위한 AI-Ready 포맷 표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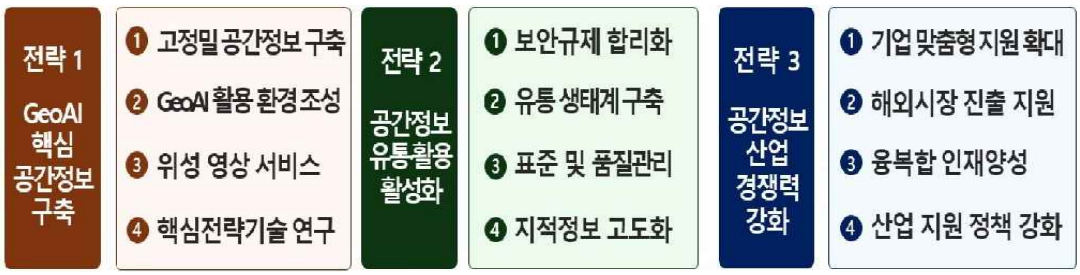
AI 시대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 입체·모빌리티·지하 공간지도 고도화함
  - 3차원 입체지도로 전환, 로봇/차량을 위한 정밀도로와 보행/실내지도 구축
- Geo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함
  - 공간정보를 AI가 학습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고, 공간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GeoAI 기술 투자 확대
- 위성 인프라 확충과 AI 분석 활용을 지원함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지방 창업지원센터 신설과 성장 지원
  - 수도권(판교) 중심의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 신규 설치
- 강소기업 사업 참여 및 해외 진출을 확대함
  - 강소기업 사업 참여 및 해외 진출 확대
-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을 확대함

< 3대 추진전략 및 12대 추진과제 >



임 형 빈 지역도시연구팀 연구위원

✓ 대한민국 AI 수도를 선언한 충청남도 민선 9기 주요 전략인 AI 산업 혁신과 관련된 국토부 공간 정보 산업 육성이 추진됨에 따라 충남의 공간 정보 인프라 정비, 관련 산업과 인력 양성이 필요함

국토교통부

‘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본격 추진

-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
- **「2026년 드론·UAM 박람회」 계기로 2028년 초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운항모델을 처음 제시**
- **초기 인력 해외 의존 탈피를 위한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가동**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속도 낸다.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 2026.07.15.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UAM 상용화 본격 착수

-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시범운용모델 수립하고,
- 미래 하늘길을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본격 착수

구분	주요 내용
기존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
향후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 구체화 및 구체적 실현 목표

UAM 최초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개시

-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함께, 2028년 UAM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기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예정
-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 분야이며, 향후 운영 목적에 맞추어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분리하여 맞춤형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할 계획
- 최종 선발되 인원에게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 취득 등 지원할 예정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범운용모델 마련

-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

  ※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초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
- 이번 모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지방정부·산업계와 협의, 2028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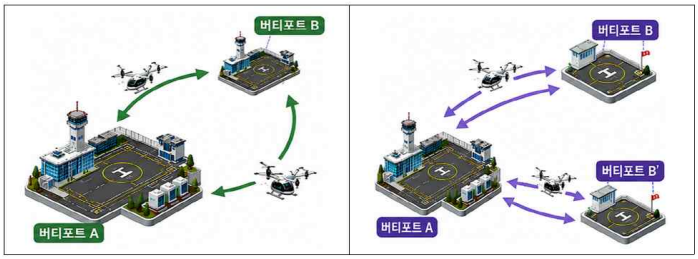
UAM,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

- 시범 운용을 통하여 축적된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 UAM 조종사·정비사 선발 규모와 훈련 시기 등 기체 제조사 및 관계기관·산업계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장
-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음

[초기 시범운용 서비스모델 유형]

A to A 모델

A to B 모델



(재)충남테크노파크

✓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운용모델과 연계한 충남형 UAM 실증·산업화 생태계 구축 필요**

- 2028년 UAM 시범운항 기준 구체화에 대응하여, 충남 UAM 사업을 인프라 구축에서 실증·사업화 단계로 전환 필요
- 충남의 시험평가 기반과 지역 교통수요를 연계한 운항모델을 발굴하고, 도내 대학·기업·시험평가기관이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기체·부품기업 육성, 버티포트·관제 기반 구축을 통합 추진 등 충남형 UAM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해양수산부

'김' 세계 표준화 주도 : 코덱스 세계규격 초안 중간심의 통과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제49차 코덱스 총회에서 '김' 세계규격 초안 중간심의 통과. 2026.07.09.

코덱스(CODEX)의 김 제품 세계규격 제정 절차 8단계

- 7월 6일 ~ 7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하 코덱스) 총회에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초안'이 중간 심의(5단계)를 통과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기준·규격을 개발하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위원회(1962년 설립, 현재 189개 회원,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
- 세계규격 제정 절차 8단계
  - ① 제안서 상정(총회) (2025.11) → ② 초안 작성(제안국) → ③ 회원국 의견수렴 (2026.2~3) → ④ 초안 심의(분과) (2026.4~5) → **⑤ 통과 - 중간심의(총회) (2026.7)** → ⑥ 회원국 의견수렴 → ⑦ 분과위원회 심의 → ⑧ 최종 심의·채택 (총회)

김 제품 세계규격안의 주요 내용

- 제품 유형 :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 원료 기준(혼입 허용비율) : 파래, 감태, 매생이 등 혼입 가능
- 품질기준
  - 고유의 향미와 색깔, 이미 및 미취가 없어야 함
  - 수분함량 : 마른김 7~14%, 구운김 5%, 조미김 5~10%
  - 산가 : 튀김 또는 유처리 조미김 3.0 mg KOH/g
- 식품 첨가물
  - 마른김, 구운김은 불허
  - 조미김은 일부 물질 허용
- 오염물질 및 위생 : 코덱스 관련 규정 준용
- 중량 및 측정
  - 중량(g 또는 Kg) 또는 매수로 표시하거나 병행 표시
  - 표기 내용량 미충족시 결함으로 간주
- 포장 및 표시방법

기대효과

- 그동안 김 제품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식품규격이 없어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국제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발생
-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김 수출 확대와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가 기대
  - 비관세장벽 완화
  - 해외시장 확대
  - 한국 김의 신뢰도 및 경쟁력 강화

의의 및 향후 추진계획

- 김제품 세계 규격 중간 심의 통과는 우리나라가 최대 김 수출국으로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한 결과
-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김 제품 규격안에 대한 분과위 심의에 앞서 회원국 의견수렴과 설득을 이어나갈 계획

*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김 진 영 농정혁신연구팀 연구위원

✓ **충남 김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최종 심의·채택 관련 코덱스 규정 준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

✓ **관련 규정 준용을 위한 시설, 설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외
도전의 문은 넓히고, 지원은 두텁게
-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08.13.

1만 명의 혁신 창업가를 선발, 단계별 보육·경연을 통해 체계적 성장경로 조성

- 공모·보육(10,000명): 1:1 초기 멘토링, 창업활동자금(2백만 원), AI솔루션
- 지역 오디션(2,200명): 초기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GPU, 수출교육, 규제스크리닝, 선배창업자·기술멘토링, 협약보증, 투자 IR
- 대국민 경진대회(400명), 상금+투자(최대 10억원), 후속 사업화, 글로벌 진출 지원
  - (일반·기술) 공모·보육(8천명) → 지역오디션(1천명) → 대국민 경진대회(2백명)
  - (로컬) 공모·보육(2천명) → 지역오디션(1천2백명) → 대국민 경진대회(2백명)

도전의 문 확대, 지원체계 내실 강화,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도전 기반 조성

구분		1차 모두의 창업		2차 모두의 창업
도전의 문	규모	5천명 혁신 인재 선발 대학·AC 등 100여곳	▸	2배 규모 확대 1만명 발굴 대·중견, 공공 등 170여곳
	리그	일반/기술 + 로컬 트랙	▸	일반/기술 + 로컬 트랙 대학 + 청소년 + 소셜 + 글로벌
지원 체계	지원	창업활동자금, AI 솔루션 도전경력증명서 발행	▸	창업활동자금 활용처 확대, AI솔루션 품질 제고 도전경력증명서 창업지원사업·융자 등 우대
	문화	지역별 창업 오디션 개최	▸	선배창업가·동기·창업생태계·투자사 전국적인 창업 커뮤니티 구축
기반	신뢰	보안체계 개편 및 거버넌스 구축		

(향후 추진계획) 8월 20일부터 본격 시작 예정

- 2차 모두의 창업 공고(8.20) → 합격자 발표(10월초) → 초기 멘토링(~11월)
- 10월 중 1만명의 혁신 창업가를 선발한 후 단계별 보육·경연 프로그램과 범부처·민간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1만 명의 도전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성장경로를 지원할 계획

이 관 률 경제·산업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1차 모두의 창업(3.26~5.15) 공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충청권은 9,342명으로 전체의 14.8%)

✓ 충남도 및 시군 차원에서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홍보 강화 및 충남의 선정 지원

✓ 충남 차원의 보육기관 및 멘토 풀의 목록화 및 육성, 대학 및 청소년 특화 리그 지원

한국고용정보원

지방 소멸 위기 극복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2026.07.31.

지방 소멸 및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정책 방향

- 지방소멸을 인구감소와 함께 청년 유출과 지역 산업 기반 약화, 정주 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 작용 진단
- 특히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함께 지역 일자리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
-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이 단순한 취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주민의 정착과 지역활력 회복, 지속가능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통합적 정책 영역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지방 청년의 유출실태 분석과 지역 정주 제고 방안

-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지역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과 지역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첫째, 대학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1차 유출을 줄이기 위해 지역인재 정책을 다양한 전공 분야로 확대하고 장학금과 교육 지원 강화 둘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정착 지원 강조 셋째,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 확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의 재정립

- 지방소멸 시대에 기존의 지역 일자리 정책 개념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
- 이에 지역 일자리정책은 취업지원과 고용창출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지방소멸은 인구감소를 넘어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지역활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로컬 크리에이터의 가능성을 보다

-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정책의 강조점이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산업적 연결을 유도하여 일자리가 생길 조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 제안
- 다양한 유형이 지역 내에서 협업할 때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환류하는 산업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함. 다만 이러한 연결이 실제 고용 확대와 정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 관찰 필요

윤 향 희 자치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 지방소멸 시대 지역 일자리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 구축으로의 전환 △산업 중심 접근에서 직무 중심의 숙련생태계 강화 △개별 사업 평가에서 지역 차원의 공동 성과관리 체계 구축 제시와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착과 지역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 구축 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연부터 비즈니스까지, K-대중음악 해외 진출 확대"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보도자료. 2026.08.04.

전 세계 8개국에서 공연·비즈니스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코리아 스포트라이트'는 해외 음악 페스티벌 참가와 자체 쇼케이스 개최를 통해 국내 우수 대중음악 뮤지션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콘진원의 대표 해외 진출 사업임
- 공연과 함께 현지 레이블, 프로모터, 플랫폼 등 음악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후속 협업 기회 발굴을 지원함
- 올해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독일, 태국, 멕시코, 베트남, 스페인, 일본, 대만 등 총 8개국에서 사업을 추진함

뮤즈온 출신 아티스트 4팀, 동남아 음악시장 진출 나서

- 이번 '코리아 스포트라이트 @인도네시아'에는 콘진원의 신인 뮤지션 발굴·육성 사업인 '뮤즈온(MUSE ON)' 출신 아티스트가 참여함. 참가팀은 ▲캔트비블루(can't be blue) ▲윤마치(MRCH) ▲너드커넥션(Nerd Connection) ▲실리실키(Silly Silky) 등 4개 팀
- 이들은 먼저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자체 쇼케이스를 통해 현지 관객과 음악산업 관계자에게 각 팀의 음악을 선보임
- 이어 참가팀은 발리에서 열리는 '악세안 페스티벌(AXEAN Festival)' 무대에 올라 현지 관객과 만남

글로벌 인지도 확대 및 비즈니스 진출 기반 강화

- 참가팀은 공연 외에도 비즈니스 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향후 현지 공연, 유통, 협업 가능성을 모색함
- '코리아 스포트라이트 @인도네시아' 이후에도 일본과 대만에서 뮤즈온 출신 아티스트들이 음악 페스티벌과 자체 쇼케이스, 비즈니스 행사에 참여해 글로벌 인지도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진출 기반을 넓혀갈 예정
- 콘진원은 앞으로도 국내 대중음악 뮤지션들이 세계 각국의 관객과 음악산업 관계자를 만나 실질적인 해외 진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기회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힘

(재)충남콘텐츠진흥원

✓ 충남 대중음악 뮤지션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 음악 페스티벌 및 쇼케이스 참가와 현지 음악산업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서울시, 식생활교육 전문강사 양성 지원

출처: 한국농업신문, '서울시, 식생활교육 강사 20명 모집...교육비 전액 무료'. 2026.08.05.

미래세대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 서울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미래세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8월 10일까지 '2026 서울시 식생활교육 강사 양성과정 제 14기' 수강생 20명을 모집함
- 서울시가 주최하고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가 주관하며, 교육생의 부담 없이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비 전액을 지원함

이론·실습·현장견학을 연계한 체계적 교육

- 교육은 9월 한 달 동안 매주 월·화·목요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진행되며, 대면강의와 식생활·급식 관련 현장견학으로 구성됨
- 교육생은 식생활교육의 이론과 교수법을 학습하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등 관련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친환경급식과 식재료 유통과정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향후 심화교육과 전문강사 선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시민·학부모를 지역 식생활교육 인력으로 육성

-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기본과정 수료 후 2년 이내에 심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시민임
- 식생활지도사 과정 이수자나 관련 분야 경력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식품·영양 관련 면허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학부모는 선발 과정에서 우대함
- 서울시는 시민과 학부모를 지역의 식생활교육 인적자원으로 발굴하고, 기본교육·심화교육·전문강사 선발을 거쳐 실제 교육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성장경로를 제공함

양성에서 현장 파견까지 연계

- 기본과정 수료자는 향후 심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화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한 사람은 '서울시 식생활교육 전문강사'로 선발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교육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문인력의 발굴·교육·선발·현장 파견을 연계함으로써 식생활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구조임.
- 이를 통해 시민과 학부모의 식생활교육 역량을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하고, 영유아가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

이 다 겸 농정혁신연구팀 연구원

- ✓ 충남은 일부 시·군과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식생활교육이 개별 운영되고 있어, 강사 양성부터 현장 파견까지 연계하는 도 단위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함
- ✓ 기존 사업과 시·군 사례를 연계해 '충남 식생활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표준교육 이수와 수업 평가를 거친 강사를 어린이집·유치원·늘봄학교 등에 파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전통 식문화 및 탄소중립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여성농업인과 경력보유여성, 관련 자격을 가진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미래세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지역 먹거리 가치 확산,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 귀농인 5년 만에 전국 1위·귀어도 최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2026.06.30.

귀촌가구 7.4%·인원 8% 증가, 40대 이하 2만 명 넘어

- 전라남도가 전국 귀촌 가구가 감소하는 상황과 달리 귀농·귀어 가구 수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귀농어귀촌 1번지의 위상을 공고히 함
- 전남도가 국가데이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 지역 귀농·귀어·귀촌 가구는 총 3만 1천546가구, 인원은 3만 8천564명으로 집계됨
- 가구 수는 전년보다 7.5% 증가함

귀농·귀어·귀촌 모두 증가, 40대 이하 귀촌인 증가가 주요 요인

- 귀농 분야 전남의 귀농 가구는 전년보다 7.7% 증가한 1천633가구(2천68명)를 기록, 전국 전체 귀농 가구의 18.7%를 차지하며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전국 1위를 차지함
- 귀어 가구도 전년보다 19.6% 급증한 232가구(303명)로, 전국 귀어 가구 10곳 중 4곳이 전남을 선택하며 전국 1위임
-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귀촌 분야로 전국 귀촌 가구 수가 전년보다 0.5% 소폭 감소한 반면, 전남의 귀촌 가구는 2만 9천681가구로 전년보다 7.4% 늘었으며 인원도 약 8% 증가함
- 이는 40대 이하 귀촌인이 59%(2만 1천204명)를 차지해 귀촌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 발휘로 풀이

- 이 같은 성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파격적 주거 지원책인 '전남형 만원주택'과 '새뜰하우스 지원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됨
- 여기에 예비 귀농·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 '전남에서 살아보기',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 등 촘촘한 단계별 맞춤형 유치 전략이 정교하게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판단됨
- 주거·일자리·공동체·소득 지원이 연계된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임

제 수 진 지역도시연구팀 연구원

✓ 충남도는 이미 귀농·귀촌 유입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단순한 유치만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는 벗어나 정착형 정책으로 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남의 경우 40세 이하 귀촌인이 증가한 것 사례로 충남도는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 개를 핵심 타깃으로 설정해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한 유입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체험과 교육, 일자리, 주거, 소득 등을 연계한 단계별 정착지원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임

부산광역시

부산시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공모 선정

출처: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시, 산업부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 공모 최종 선정!. 2026.08.13.

부산시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 공모과제 최종 선정

-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2026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스마트카 R&D) 사업 공모과제에 최종 선정
-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부산항만공사가 총괄 주관하고 지역 및 분야별 기관·기업이 참여
- 인공지능(AI) 기반 통합관제·실증, 비가시 영역 인지 및 메가와트(MW)급 자동충전 등 항만 특화 자율주행, 24시간 무인 운용을 위한 전동화 자율이동로봇(AMR) 모빌리티 핵심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예정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조감도]

총 454억 6천만 원 투입, 항만 자동화·무인화를 위한 3개 세부과제 통합 추진

- (제1과제) 항만 모빌리티 무인 운용을 위한 항만 특화 자율주행 기술개발
- (제2과제) 전동화 기술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기술개발
- (제3과제)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통합관제 및 실증기술 개발

부산항의 물류 운영 효율과 안전성 증대 및 기술 고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고도화된 물류 처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
- 'UAE 칼리파항 스마트항만 시스템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
- 국산 스마트항만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

사업 개요

- (사업명)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
- (기간) 2026~2029(4년)
- (위치) 부산항신항내 물류터미널(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일원
- (수행기관) 총괄: 한국자동차연구원, 부산항만공사, 참여: 성우하이텍, 효성전기 등 주요기업
- (총사업비) 454.6억 원(국비 200, 시비 150, 민자 104.6)

[세부과제별 개발 개념도]

김 정 아 환경에너지생태연구팀 연구원

✓ **충남도는 'AI 기반의 모빌리티 테스트필드 사업'과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을 다지고 있으므로, 도내 무역항을 연계한 고도화된 스마트 물류 전략이 필요함**

✓ **현재 계획 단계인 '스마트팜 특화항만 조성 사업'과 당진항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첨단 물류단지 구축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실행 동력 확보가 중요함**

인천광역시

‘화학사고 안전신호등’ 국가 안전관리 표준화 추진

출처: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기획)인천, 화학사고 막는 ‘안전신호등’ 켠다. 2026.08.04.

화학사고(10건 중 9건 이상), 시설 결함·안전기준 미준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모두 49건이며,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92명이 다침
- 사고 원인은 시설 결함 23건, 안전기준 미준수 23건으로 두 원인이 전체의 93.9%를 차지함. 특히 2025년에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
- 인천시는 사고를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만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작업자에게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각적 식별체계와 물리적 연결 차단 장치를 갖추는 방향을 화학사고 예방 정책을 전환함

전용 연결장치로 오주입 이중 차단

- 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은 화학물질별 전용색상을 저장탱크부터 배관·밸브·주입구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 서로 다른 물질의 주입 호스가 잘못 연결되지 않도록 전용 연결장치를 적용하는 예방 체계임
- 이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착각하더라도 그 실수가 오인·오주입·혼입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업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임

민간사업장으로 시스템 확산

- 화학안전 신호등은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행 법령에 따른 취급기준, 경고표지, 안전교육, 시설검사와 비상대응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각적 식별과 물리적 연결 차단 장치를 더해 사람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
-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현장 개선으로 연결하고, 공공시설에서 먼저 적용한 뒤 민간 사업장으로 확산해 국가 제도로 발전시키는 상향식 화학사고 예방모델을 인천이 선도하겠다는 구상임

인천의 현장 경험을 국가 안전 표준으로

- 인천시는 올해 민간사업장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현장 적용 결과를 축적해 업종·시설별 적용방법과 유지관리 기준을 정립할 방침임
- 2027년 이후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예정
- 중장기적으로는 화학물질별 시각적 식별체계 도입, 저장탱크·배관·밸브·주입구의 일관된 표시기준 마련, 오주입 방지를 위한 전용 연결장치 적용 등 인천에서 실증한 예방 방안이 법령과 지침 등 국가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임

임 다 정 자치전략연구팀 연구원

✓ 화학사고 예방정책이 작업자 개인의 주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예방형으로 전환되고 있음

✓ 충남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만큼, 인천의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울산광역시

늘어나는 반려동물 대응을 위한 반려동물 전담 조직 확대

출처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울산시 늘어나는 반려동물 행정수요에 조직개편으로 대응. 2026.08.06.

반려동물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조직 재설계

- 울산광역시는 한 팀이 성격이 전혀 다른 동물보호·복지 업무와 가축전염병 방역 업무를 병행해 오면서, 가축전염병과 유기동물·반려동물 행정 수요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함
- 이에 따라 2026년 8월 13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반려동물팀'(5명)을 '반려동물센터팀'과 '동물방역팀'으로 분리

(동물방역팀) 가축전염병 대응 전담

- 동물방역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활동에 집중함
- 가축전염병은 발생 즉시 광역적·초동적 대응이 요구되는 재난형 이슈로, 동물보호 행정과 분리된 전담 조직이 확보되면 예찰-초동대응-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방역 체계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반려동물센터팀) 복지·문화 전담

- 신설되는 반려동물센터팀은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조성, 유기동물 보호·입양 활성화, 동물학대 예방, 동물등록제 운영 등 복지·문화 업무를 전담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에 집중함
- 아울러, 가축방역 업무와 분리됨으로써 시민 체감도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행정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시행 초기 단계로 단계별 인프라 확충 등 계획

- 향후 반려동물센터팀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동물방역팀은 축산농가 예찰 체계와 방역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조직 분리형 개편은 예산이 아닌 인력 재배치 중심이라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보이기는 어려우나, 유기동물 보호·입양 처리 속도, 가축전염병 초동대응 시간 등 업무별 성과지표를 향후 분리 관리함으로써 조직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정을 할 계획임

*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정 민 영 공간인프라연구팀 연구원

✓ 반려동물 복지와 가축 방역은 성격이 다른 영역인 만큼,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타 시·도의 조직 운영·정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업무 성격에 맞는 전담 체계를 마련하여 동물등록·복지 정책과 가축전염병 예방·방역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동물 행정 체계를 충청남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핵테온 세종’ AI·사이버보안 협력 중심지로 자리매김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2026.07.10.

AI·사이버보안 협력 중심의 디지털 혁신 플랫폼 구축

- AI 기술의 확산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됨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핵테온 세종」을 개최하여 AI와 사이버보안을 연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 「핵테온 세종」은 AI와 사이버보안을 중심으로 국제 경진대회, 학술대회, 산업전시회 및 정책 교류를 연계하여 기술 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융합형 플랫폼임
- AI 기반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관 협력 강화 및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내용) 글로벌 AI·사이버보안 협력 플랫폼 운영

- 글로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47개국 216개 대학, 548개 팀, 1,799명 참가)
- AI·사이버보안 학술대회를 통해 AI 기반 사이버보안 기술, 정책 및 국제 협력 사례 공유
-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국가사이버안보 세미나, 지방정부 정보보안 실무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산·학·연·관 협력 기반 확대

(사업내용) AI·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 AI·사이버보안 한마당 개최 및 우수 학생 시상을 통해 미래 인재 발굴·육성
- 경진대회 참가자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내외 인재 네트워크 구축
- 국가정보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AI·사이버보안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

- 국가정보원 공동 개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협력 행사로 위상 강화
- 국내외 전문가, 대학, 기업 등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
- AI·사이버보안 분야의 기술 교류, 정책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 향후 교육발전특구,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및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지속 추진

김 가 은 공공디자인연구센터 연구원

✓ **충청남도는 민선9기 핵심 공약인 ‘AI 수도 충남’ 추진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과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세종특별자치시의 「핵테온 세종」 사례를 참고하여 AI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공공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정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AI 기술을 경관,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분야에 접목하여 관련 분야의 기획 및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정책방향 마련 필요**

충청북도

AI 복지 혁신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안심 충북' 구현

출처: 충청북도 보도자료. 2026.07.2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7.29.

충북도, AI를 활용한 적극적 복지 행정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분야 AI 시범사업 공모인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에 최종 선정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적극적 복지 행정체계 구축에 본격 시동
- 최첨단 AI 복지 모델을 현장에 시범 도입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인공지능 서비스와 복지공무원 업무지원 인공지능 현장적용을 목적으로 함
- 충북도, 경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개 광역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충북의 참여 기초지자체는 청주·충주·옥천·진천이 해당됨

지역특화 서비스에 대한 실험 및 검증 필요

- 단순 챗봇 도입사업을 넘어 AI 답변의 정확성, 설명가능성, 오류위험을 실제 행정 환경에서 검증하는 규제·운영 실험 성격
- 지역별 복지수요, 서비스 공급기관, 취약계층 특성이 다른 지점을 통해 중앙 표준모델과 함께 지역특화 서비스 모델 필요

AI 정책실험실 핵심 추진과제

- (AI상담·안내) AI 챗봇 상담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어려운 절차 없이 필요한 정보안내
- (업무지원 AI) 복지 담당 공무원의 단순·반복적인 업무지원, 신청자 정보 기반 사례별 적합서비스 추천
- (모바일 기기활용) 태블릿 기기를 통한 대상자 정보 제공 등, 복지 현장에서 심도 있는 복지서비스 상담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지원

AI 기술도입을 통한 도민의 복지 접근성 확대 기대

- 소외된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누수 없는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복지 접근성 확대 기대
- AI 기술을 복지 행정에 접목하여 충북도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 혜택과 급여를 빠짐없이 받는 '사각지대 없는 안심 특별도' 조성 계획

강 수 현 경제·산업연구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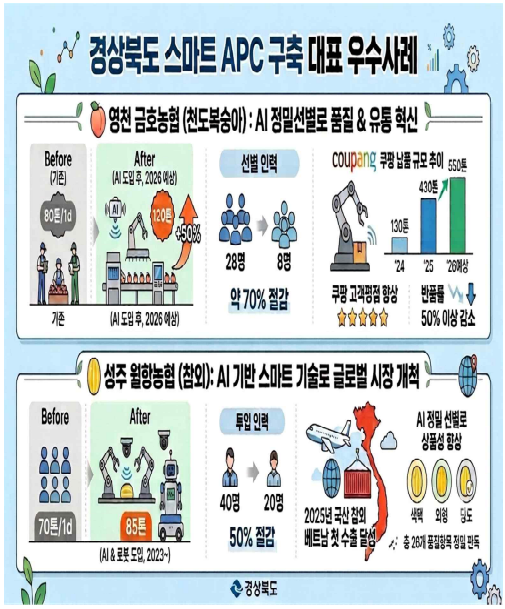
✓ 충남도는 AI 기본사회보건복지실 신설, AI 돌봄로봇, 통합돌봄 논의 등 주민의 복지 접근성과 공공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전략 구상 중으로 위기신호 감지 및 현장확인, 서비스연계까지 전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자체 실증모델 설계 필요

✓ 복지행정의 AI는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독거, 고립위험, 돌봄 공백, 반복 민원 등의 신호를 탐지하되, 민감성 개인정보 관리 및 수급자격 판단, 급여결정 등 책임자에 대한 역할 명확화 고려

경상북도

경북도, AI기반 스마트 APC 확산… 농산물 유통 혁신 본격화

출처 경북 보도자료, 경북도 AI기반 스마트 APC 확산… 농산물 유통 혁신 본격화. 2026.08.02



<영천 금호농협(천도복숭아) AI선별기 도입>

경북도, 스마트 APC로 유통 AX 가속

-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로 산지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APC구축을 확대하며 농산물 유통체계의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고있음
- 경상북도는 2023년부터 기존 APC에 AI를 접목한 스마트 APC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화를 추진해 산지유통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AI, 로봇 기반 APC 구축, 인력난 해소 및 품질·물류 효율화

- 스마트 APC는 AI가 농산물의 색상·당도·외형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자동화 설비가 선별·포장·물류를 수행하는 미래형 산지유통 인프라로, 인력난 해소는 물론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에도 크게 기여함
- 또한 스마트 APC 구축은 단순한 시설 현대화를 넘어 산지유통의 체질을 기존 숙련 인력의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정책으로, AI를 활용하여 품질 균일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력난 해소 및 유통비 절감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짐

2030년까지 1,433억 투입… 데이터 기반 산지유통 인공지능(AX) 전환

- 경상북도는 앞으로 노후 APC를 스마트 APC로 전환하고 AI 기반 수급·가격 예측, 온라인도매시장 연계,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해 생산부터 선별·출하·판매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연결하는 미래형 산지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433억 원을 투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506억 원을 확보할 계획
-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스마트 APC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 스마트 APC를 지속확대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유통 혁신을 지속해나갈 것을 기대함

목 소 리 자치전략연구팀 연구원

✓ 충남 역시 농촌 고령화와 노후 산지유통시설 비중이 높은만큼, 기존 APC의 현황을 진단하고, 스마트화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 시설지원에 그치지 않고, 충남형 산지유통정책도 온라인 거래 확대 및 스마트 물류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거점 통합유통 플랫폼 형태로 설계되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4회 연속 재인증 추진

출처: 컬처제주. 道,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4회 연속 재검증 도전. 2026.07.3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4회 연속 재인증 및 지속 가능성 점검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 유지를 위한 재검증으로 4회 연속 유네스코 전문가의 제주 현장심사 진행
- 2010년 국내 최초 세계지질공원 지정 이후 4년마다(2014, 2018, 2022년 승인) 재검증을 거쳐 자격을 재인증받아야 하며, 네 번째 재인증으로 유네스코 3관왕 유지 및 주민 주도형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점검

지역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주민 주도형 활용 모델 완성

- 국제적 인증을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연계하는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경관 중심 관광에서 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고자 함
- 지역 자원 기반으로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관광콘텐츠와 지역 소득으로 환원하여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활용모델을 구축

자원 관리 보전·운영 및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추진

- 성산일출봉, 수월봉, 산방산·용머리해안 등 제주의 대표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4년간의 관리 보전 실태를 정밀 점검
- 재검증 권고사항 이행과 지질공원 홍보 및 활성화,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며, 주민참여형 지질트레일 행사 개최, 지질공원 해설사 신규 양성, 지오스쿨(Geo-school)운영, 지오브랜드 확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제주 세계지질공원>

자원 기반의 체류형 관광·교육 콘텐츠 강화

- 성산일출봉, 수월봉, 산방산·용머리 해안 등 주요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탐방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질유산을 관광·교육 콘텐츠로 활용
- 또한 제주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제주 해녀문화를 활용한 마을별 해녀 체험프로그램(해녀 도슨트, 물질체험, 해녀밥상 등)을 '해녀스테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여 체류형 관광 운영을 고도화

<'카름스테이' 로컬스토리 체험상품>

신 선 하 농정혁신연구팀 연구원

✓ 충남 서산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를 계기로, 서천갯벌,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문화유산), 한산모시짜기(인류무형유산) 등 충남이 보유한 다양한 유산자원을 연계한 통합형 로컬브랜딩이 필요

✓ 자원의 가치를 알리는 탐방·교육 프로그램과 인근 유산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여 관광객에게 지역의 자연과 생활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책이슈 리뷰

Policy Issue Review

정책이슈 리뷰는 충남연구원과 충청남도가 공동 발간하며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콘텐츠진흥원이 함께 합니다.